‘서울형 한옥’에 지원금… 도시경관 향상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시행
현대한옥 등 건축자산 활성화 일환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사항 규정
기준 준수, 등록한옥 지원금 보조

관광객들이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도시 경관 향상과 현대 한옥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한옥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1억원을 들여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계획·절차)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6월까지 ‘서울형 한옥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로 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및 운영의 기본방향 재정립 ▲서울형 한옥·건축자산 가이드라인 수립 ▲한옥 등 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마련이다.

시는 “전통적 요소 위주의 한옥 디자인 규제로 마을별 특색이 모호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새로운 한옥 유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새 한옥건축 양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관내 한옥 밀집지역 11곳을 7개 지구단위계획 구역(북촌·경복궁 서측·인사동·익선·돈화문로·운현궁·은평)으로 관리 중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층수·형태·마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비용지원 기준을 준수한 등록한옥에 한해 수선·신축비를 보조한다. 시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한옥은 지상구조에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 처마 깊이는 최소 90㎝ 이상이며 1층과 2층 면적 비율이 5대4인 전통 가옥이다.

시는 등록한옥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옥 전체 수량이 감소해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갖추기로 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주택 및 한옥 수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관내 단독주택 수는 총 30만7075채이고, 한옥은 전체의 2.8%인 8586채로 조사됐다. 등록한옥은 984채로 등록률은 11.46%에 이른다. 2014년 등록률 4.82%(전체 한옥 1만1776채 중 568채)와 비교하면 6.64%포인트 늘었다. 반면 한옥 수는 2014년 1만1776채에서 2020년 8586채로 약 27.1% 줄었다.

또 시는 현대적 건축요소를 접목해 편리하면서도 독특한 하이브리드 한옥이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도의 한옥은 ‘서울시 등록한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선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시는 한옥신축 활성화, 한옥의 다양한 활용, 신한옥양식 건축지원, 마을별 건축기준 차별화를 서울시 한옥 발전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시는 서울시 한옥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한옥구조 허용 범위를 확장키로 했다. 지역과 용도별로 차별화된 지구단위지침과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요소 도입 정도에 따른 ‘서울시 한옥등록제도’를 개선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CES 2022 개막… 역대 최대 ‘서울관’ 운영

서울디지털재단, 오늘 오픈 세리머니
기업 25곳 참가… 서울피칭데이 진행

서울디지털재단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2’의 개막일인 5일 오전 9시 40분(현지시간) 오픈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서울관’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서울관은 전 세계 스타트업들의 전시 공간인 ‘유레카 파크’에 역대 가장 큰 310㎡(약 94평)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CES에 서울관을 조성·운영해왔다. 올해 서울관에 참가하는 기업은 25개사다.

서울관에서는 5~7일 국내 혁신기업을 홍보하는 ‘서울피칭데이’가 매일 진행된다. 경희대, 성균관대 학생 25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기업들의 현지 비즈니스 통역을 지원한다.

오는 7일 재단은 ‘CES 유레카 서울 포럼’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성장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대전환을 화두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창문 의무설치’ 고시원 건축조례 개정

서울시, 방 전용면적 7㎡ 이상 규정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크기는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여있었다”며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8명 공개채용

서울디지털재단은 2022년 제1차 공개 채용을 통해 직원 8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정책연구(빅데이터 분석·AI 서비스 기획) ▲사업관리(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지원 등) ▲경영지원(기획·인사·비서) 총 3개 분야로 나눠 채용을 진행한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빅데이터·AI 기반 전략 개발을 담당할 디지털 전략팀 팀장 1명과 담당자 1명을 선발한다.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할 스마트포용팀 팀장 1명과 담당자 1명을 채용한다. 경영지원 파트에서는 기획, 경영평가, 인사, 홍보 등을 담당할 기획인사팀 팀장 1명과 세무·출납 1명, 비서·총무 1명, 기관장 수행(운전) 1명 등 총 4명을 뽑는다. 기관장 수행(운전)은 계약직 채용으로 진행된다고 재단은 덧붙였다.

정규직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차 역량면접, 2차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직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최종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3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재단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대법원 옥상정원. /서울시

대법원 서관 옥상에 7.3억 들어 정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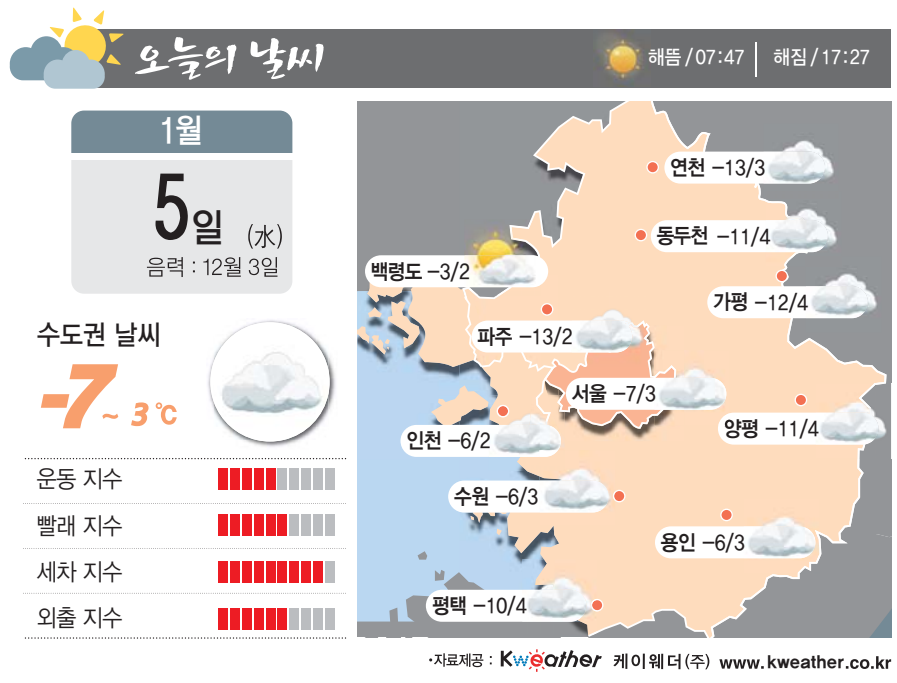
설계·조성 때 안전진단 결과 반영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서초구 대법원 서관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1995년 준공돼 26년이 경과한 건물이다. 시는 옥상녹화에 앞서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조성 공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법원 서관 옥상에 교목 10종(소나무 포함 65주), 관목 19종(블루엔젤 등 2854주), 초화류 26종(구절초 포함 6470본) 등을 심었다. 아울러 식생매트(307㎡), 벽면녹화(24㎡)로 다양한 수목을 입체감 있게 식재함으로써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비(7억3500만원)는 서울시와 대법원이 절반씩 부담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총 785개(공공·민간)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오미크론에 미국 소매업 타격…월마트, 50여개 매장 일시폐쇄
▲ 애플, 세계 최초 시총 3조달러 장중 돌파…국가 GDP 8위 수준 /사진 뉴시스

▲ 프랑스 의원들 “백신 패스 지지했다 살해 위협 받아”
▲ 佛 ‘돌연변이 46개’ 새 변이 출연…첫 보고환자 카메룬 여행이력

▲ 중국 “안보 위한 핵무기 현대화는 계속할 것” /사진 뉴시스
▲ 인도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뉴델리 샘플 81%서 검출”